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 변론센터 활동보고서

2016

10th

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보고서

2016 — 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 변론센터 활동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 변론센터 활동보고서

2016

10th

2026

2016

10th

2026

공익인권변론과 함께한 10년, 시민의 곁에서 인권의 파수꾼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공익변론의 체계화라는 원대한 뜻을 품고 2016년 4월 21일 첫걸음을 내디뎠던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어느덧 개소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달려온 지난 10년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천해 온 소중한 시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센터는 민변 공익변론을 지원하는 핵심 단위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민변 변론의 전문성을 토대로 공익인권변론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법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던 이들의 목소리를 법정에 온전히 전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원한 낙태죄 헌법소원청구,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여러 공익변론사건들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 우리 사회 인권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기금모금에 함께 해주신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연대 덕분이었습니다. 개소 5주년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기금모금을 시작했고, 현재는 '시민변론기금'을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2017년 '13번째 회비'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이 모아주신 1억 3천만 원의 종잣돈을 시작으로, 2018년 민변 30주년 후원사업, 그리고 최근 약 8천만 원 규모의 시민변론기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연대는 센터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10주년을 맞은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센터는 이번 10주년을 계기로 미래를 준비하며,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옹호 단위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오늘의 10년이 가능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회원들, 상근 활동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의 10년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인권이 특별한 가치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언제나 억울한 이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10년처럼, 앞으로의 10년도 시민과 함께 인권의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 해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철준

안녕하십니까.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철준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숫자로 읽히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국가의 벽 앞에서 홀로 서야 했던 사람,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사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들,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0년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건 번호가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있던 얼굴들입니다.

2016년 봄, 센터는 작은 다짐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가 닿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의 문턱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이들에게, 우리만큼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긴 싸움에 지칠 때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론을 맡아주신 변호사님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공익사건 하나하나를 묵묵히 지원해 온 센터 상근자들, 그리고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어김없이 손을 내밀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가 있었기에 우리는 끝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긴 사건보다 함께 버텨온 시간이 더 깊이 남습니다. 판결문에 담기지 않은 수많은 노력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마무리된 사건들, 그리고 결과와 무관하게 누군가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는 사실이 우리가 10년 동안 쌓아온 진짜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10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센터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닿을 수 있도록, 더 넓은 곳까지 함께 걸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여전히 따뜻하게, 여전히 사람 곁에서 함께하는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남겠습니다. 인권이 특별한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센터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 10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10년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설립배경

민변은 1988년 설립 후 대표적인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공익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권현안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공익변론을 전문적으로 연구,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2016년 4월 21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5만 8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하며 약 600여 건의 공익인권변론 사건을 지원해왔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군사정권 시기 강제휴학·징집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사건,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사건, 선감학원 사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망 사건, 과밀수용 관련 국가배상 집단소송,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혼인평등 소송 등이 있습니다.



5만 8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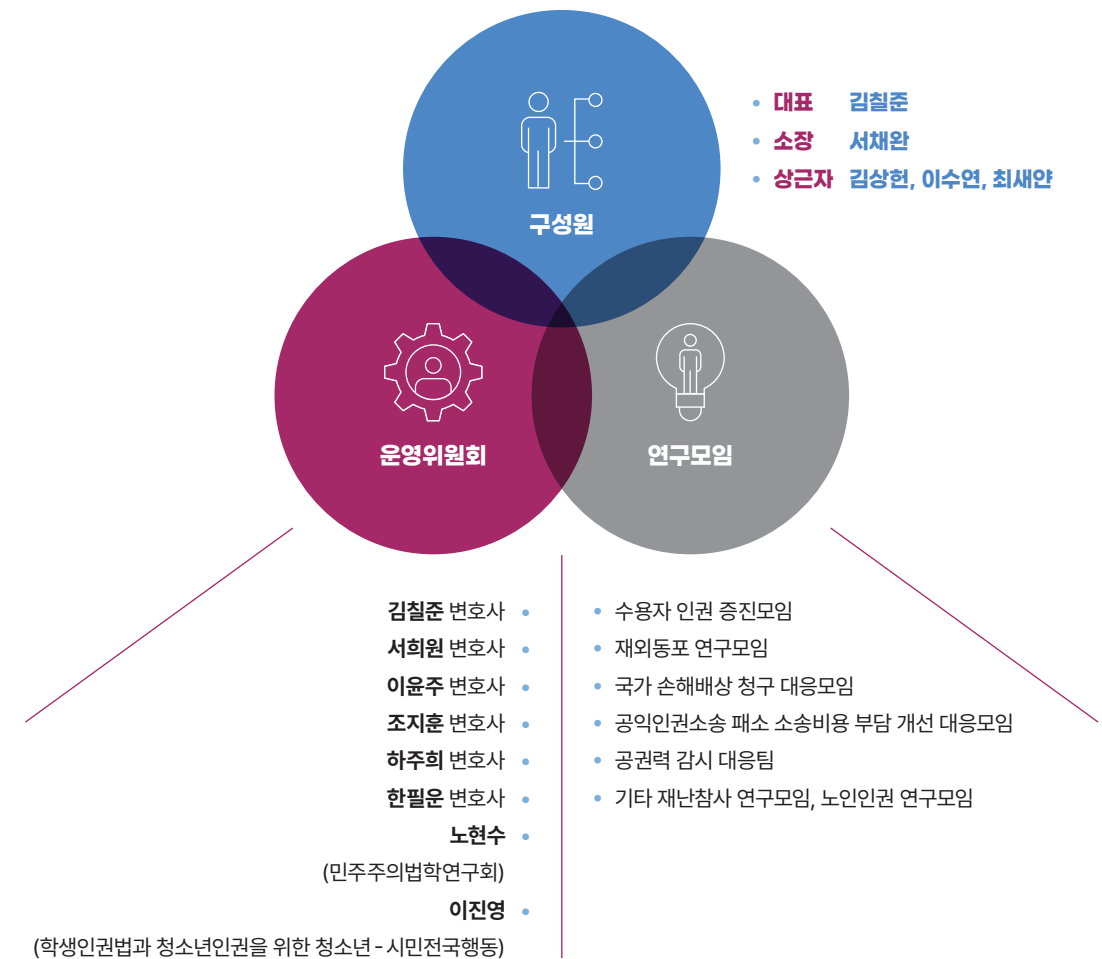


약 600여 건의 사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변론활동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용자 인권 증진모임,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모임, 공익인권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개선 대응모임, 공공영역에서의 국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감시를 위한 공권력 감시 대응모임, 재난참사 연구모임, 노인인권 연구모임 등 다양한 연구모임을 통해 주요 인권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축적된 판결문, 논문, 토론회 자료집, 교육자료 등을 디지털 도서관에 축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변 회원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도서관 자료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센터를 만들어간 사람들

전 대표

유남영
이석태

전 소장

송상교
이상희
조숙현

전 상근자

김누리 최석균
송아람 최용근
장범식
조영관
조은호

전 운영위원

강문대 위은진 조수진
강성준 이현우 조영선
김경석 임성택 최은배
김남주 장여경
오민애 정민석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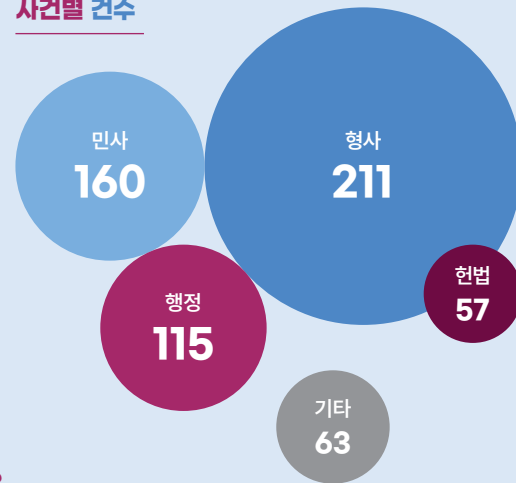
센터가 10년간 지원한
사건 수

594

연도별 건수

2016	50
2017	49
2018	46
2019	62
2020	55
2021	59
2022	49
2023	46
2024	79
2025	86
2026(2월까지)	13

사건별 건수



확정사건

298

사건별 건수

헌법	16	민사	70	행정	78	형사	105
승소	9	승소	25	소취하	12	유죄	40
패소	7	패소	36	승소	36	무죄	30
		소취하	5	패소	27	가해자유죄	2
		조정	1	난민신청	1	기소중지	2
		화해권고	3	기타	2	불기소	16
						불송치	4
						수사중지	1
						상담후 종결	1
						선고유예	8
						기소유예	1

기타 29

국가보안법 변론기록 분석작업 실비 지원	준항고
내부제보실천운동 단체행사 후원	시민 배포용 책 제작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 기금 지원	군형법 해외판례번역 비용 지원
센터 명의 집회 주최	재일동포행사 비용 지원
유엔 진정	
인권위 진정	
군형법 전문가의견서 비용 지원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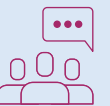
사건 영역

12.3 내란사건	8	기타	38	생명과 안전	39	정보인권	26
과거사청산	28	난민인권	5	소수자 인권	56	집회의 자유	99
교육	5	노동	37	수용자 인권	10	참정권	18
국가보안법	26	동물권	7	아동인권	11	표현의 자유	58
국제연대	3	민생	25	언론의 자유	15	한반도평화	4
국제통상	4	사법	3	여성	33	환경보건	14
군인권	8	사회권	8	이주민 인권	7		



변론을 지원 받거나 상담을 받은
시민 수

58,564명



변론센터가 지원하는 변론기금

총 액수

약 8억 원

연평균 약 8,000만 원



한 눈으로 보는 공익인권변론센터 활동

2017

-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자활근로자 사망 국가배상청구
- 용산기지 환경오염조사 정보공개청구
-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헌법소원
-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른 주민 소송 상고심 지원

2019

- 고양저유소 풍등화재 피고소 법률지원
-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 HIV 강제검사 국가배상청구
- 무지개색 옷을 입은 학생에 대한 장신대 부당징계 무효확인청구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 집회시위 참여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손해배상청구

2016

- 통신자료 제공 요청 근거조항 헌법소원(제1호 사건)
-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확인을 위한 조사관 임금청구
- 교육대학교 수시 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헌법소원 청구
-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재판 법률지원

2018

- 불법적인 해외입양 국가배상청구
- 인도적 체류자 테러방지법 위반 형사재판 법률지원
-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 고소, 고발, 법률지원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상고심 지원

2020

-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지자체 손해배상청구
- 공공기관 사용 채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정보공개청구
- 공익소송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규정 헌법소원 청구
-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 헌법소원 청구
- 외국인 강사 HIV 검사 요구 국가배상청구

2021

-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기소 사건 변론지원
- 일본군 '위안부'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 스텔라데이치호 참사 실종자 대책위 법률지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청구

2023

- 10.29 이태원참사 형사공판 및 탄핵심판 등 피해자 법률지원
-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예술가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처분 취소소송
-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부실수사 국가배상청구
-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헌법소원 청구

2025

- 12.3 내란 관련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법률대응
-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지원
-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산재사망사고 문제에 대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 위반 유엔 특별진정
-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취재한 다큐멘터리 감독 형사재판 법률지원
- SKT유심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단분쟁조정신청

2022

- 법무부의 인공지능알고리즘학습 목적 안전이미지 활용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재심청구 및 국가배상청구
- 기숙사 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국가배상청구
-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청구
-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2024

- 무기류 수출입 무역통계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쿼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 교회재판 및 사회재판 지원
- 카이스트 '입찰막' 사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및 통지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트랜스젠더 여성의 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 취소소송



변론센터 15대 공익변론사건 및 앞으로 주목할 10대 공익변론사건 선정

선정과정에 대한 소개

경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약 590여 건의 소송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변론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변론센터가 지원한 시민의 숫자는 약 5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변론센터에서 지원한 공익인권변론사건은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오늘날 인권의 지평을 넓히고,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내며, 디지털 정보화시대 정보인권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의 인권문제를 대비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변론센터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변론센터에서 지원했던 590여 건의 공익인권변론 사건을 사건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짚어 소개해 볼 만한 주요사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위원은 모임 회원을 비롯하여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인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들로 위촉하였습니다. 선정위원들의 치열한 토론 끝에 아래와 같이 '15대 공익변론 사건'과 '앞으로 주목할 10대 공익변론사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위원(가나다 순)

가원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강술지 변호사(회원)
랄라 활동가(다산인권센터)
이상희 변호사(민변 부회장)
이승훈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이주영 박사(국제법)
이한솔 이사장(한국사회주택협회)
이황희 교수(성균관대학교 헌법학)
장여경 상임이사(정보인권연구소)
장현은 기자(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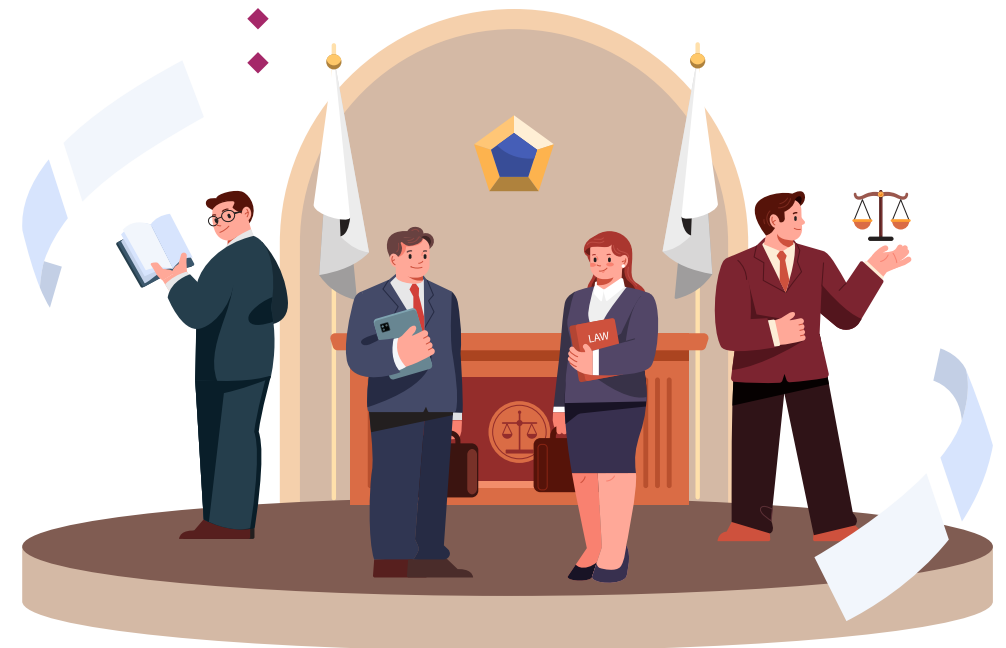
선정과정에 대한 소개

선정기준 및 방법

민변 공익인권변론사건 590여 건 중 변론센터 내부회의를 통해 1차적으로 80여 개 사건을 선별한 뒤 각 사건에 대한 정보(공익변론지원신청서, 판결문, 관련기사 등)를 선정위원들에게 제공

선정기준은 ① 공익성, ② 지원필요성, ③ 성과 및 제도변화, ④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되 선정위원 각자의 관점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선정하였으며, 위원들의 복수 투표를 거쳐 가장 많이 선정된 사건 순서로 1차 선정하고, 동수 득표인 사건은 위원들의 치열한 상호 토론을 거쳐 최종 선정

15대 주요 사건은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아직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 앞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건을 앞으로 주목할 사건으로 선정하였음.



선정위원 한마디

가원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해 12.3 내란, 기후위기 헌법소원,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이에 맞서는 투쟁역사의 기록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삼스레 공익변론의 소중함을 발견하며, 설립 10년을 맞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활동에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랄라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사건 목록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불온한 인권의 현실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의 얼굴, 누군가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의 얼굴. 이 얼굴이 모여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0년을 만들고, 우리 사회 인권을 한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살피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인권의 길을 만들어 온 공익인권변론센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결을 지키고 우리 사회에 인권을 꽃피울 수 있길 응원합니다.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선정위원회 위원장)

양날의 검과 같아야 할 울렁이 최근 한쪽은 심각하게 무뎌지고, 다른 한쪽은 잔인하게 날이 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변의 변론이 중요한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법의 공정함과 판결의 엄중함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 권리로 완성될 수 있도록 변론센터가 더욱 큰 쓸모를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강솔지 | 민변 회원

주요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건이 저마다의 이유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승소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패소한 사건조차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진 싸움이 광장에서 다른 싸움의 언어가 되었고, 기각된 헌법소원이 다음 세대 변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모든 소송은 현실에 대한 응답이자 개입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변곡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의제를 포기하지 않고 수년째 붙잡고 싸워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센터의 성과는 그 집요한 운동의 역량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10년도, 그 연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희 | 민변 부회장

판결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판결문의 행간마다 스며든 당사자들의 눈물과 결단, 그리고 변호사들의 치열한 고민과 연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승소 사건 중심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나, 선정되지 않은 패소 사건들 역시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법과 관행이라는 장벽 뒤에 가려진 존재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승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센터가 소송 투쟁의 기록을 계속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0년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그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우리 사회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법정에서 노력한 기록을 함께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참여연대와 민변 사이, 앞으로도 함께해요.^^

이주영 | 국제법 박사

지난 10년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 소수자의 평등한 인권 향유, 표현·집회시위·알 권리 등 자유권 보호, 여성인권, 수용자인권, 환경권, 민주주의 옹호 등 공익·인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법률 활동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적 과제에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중견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대표적 법률단체로서, 한국 정부 또는 기업의 활동이 다른 나라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국제인권법과 국내법률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역할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장현은 | 한겨레 기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10주년간 담당해 온 주요 소송의 기록을 짚어보는 일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주목해 온 공익 의제의 흐름을 되돌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맞닥뜨려야 했던 여러 위기를 짚어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윤석열 등 내란 세력에 대한 형사 고발 및 헌법 소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여러 사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확정사건 15건과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10건 모두 쉽사리 선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각 사건이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사건들 역시 한 건 한 건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분명히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를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더욱 뜻깊었습니다. 지난 10년이 만들어 온 변화처럼, 앞으로의 시간 역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좋은 변론'의 선봉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여경 |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지구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인류가 20세기 내내 인권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체계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토대가 이렇게나 허약했습니다. 사람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는 국가와 기업의 권력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기억과 자부심이 희망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점철되었던 우리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의 민주주의를 도왔습니다. 희망을 잘 키우려면 우리에게 '공익'이 어떤 의미인지 늘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가.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향하고 있는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선정한 사건들은 이 질문들에 답하고 지난 십년 우리 공동체가 분투해 온 가치를 돌아볼 기회였습니다. 모든 공익인권변론사건을 응원합니다.

이한솔 |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핵심적인 쟁점부터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까지 꾸준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변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축적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늘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항희 | 성균관대학교 헌법학 교수

소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일만큼 법률가에게 가슴 벅찬 일이 있을까요? 이 매력적인 일에 헌신해 온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성과를 잘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빛나는 소송보다는 필요한 소송을 찾아 힘써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15대 주요사건

01.

임신을 중단할 여성의 권리, 죄가 될 수 없다 : 낙태죄 헌법소송

당사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업무상승낙태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69조 제1항(여성의 자기낙태죄), 형법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의 낙태)이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산부인과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이 기각되자 2017. 2.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4. 11.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헌재 2017헌바127). 이 판결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올해의 디딤돌 판결로,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주요 사건으로 선정되었고, 이번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주요 사건에 재선정되었습니다.

임신중단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66년 동안 유지된 오랜 악법이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임신을 중단할 권리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을 형사처벌을 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임신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남성은 제외하고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습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8명이 참여하여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은 7년 만에 기존 결정을 뒤집어 7명 재판관의 위헌의견(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을 이끌어내 결국 제도변화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아직도 임신 중단에 관한 후속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제도적 정비를 촉구한다는 의미를 더하여 선정위원 만장일치로 주요 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02.

내 배우자는 내가 결정한다 :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소송

이 사건 원고인 동성 부부 배우자는 장기간의 교제와 공동생활 및 대외적인 공표를 마친 상태에서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대로 등록되었는데, 뒤늦게 동성부부임을 인지한 공단이 피부양자 정보를 삭제하고 지역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 a공단이 보험료 부과에 관한 판단 재량이 없고 동성부부 간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보험 영역에서 사실혼을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심(서울고등법원)은 침익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고,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상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만 이를 불인정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위법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위에서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더욱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두36800).

이 사건은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임을 확인하는 한편, 사회보험제도의 각 특성상 이성 간 혼인관계인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비교대상집단을 인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동성결합에 관해 법률상 '혼인' 또는 '사실혼'의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으나,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의의가 상당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주요 사건에 선정되었습니다.

03.

주민들의 상식적 승리 :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대법원 판결

용인시는 2010년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약 1조 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공하였으나, 운영사와의 분쟁으로 운행이 지연되고 국제중재 판정 패소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3명의 전직 용인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수요예측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연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심과 2심 판결을 거쳐 2020년에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되었고, 2024년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2025년 7월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 2026년 1월 비로소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과 전직 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전직 시장이 과도한 수요예측에 관한 확인·검토 등 재무회계행위를 함에 있어 '시장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하였으므로 용인시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두39158). 또한, 대법원은 용인시가 체결한 변경협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약 4,293억 원을 손해액으로 확정하였고, 전임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 결과를 신뢰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5%로, 교통연구원의 책임 비율은 1%로 차등을 두어 최종 책임자인 지자체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 지출 및 재산 관리 등에 관해 감사청구를 거친 후 지자체가 불복할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도입 이후에도 쉽게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용인경전철 소송은

04.

집회는 지자체 허락 없이 :

‘인천애들’ 관리 조례 위반 결정과 쿼터문화축제 집회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인천광역시시는 시청사 부지 외벽을 철거하여 도심 중심에 잔디마당과 분수광장을 설치하고 이를 ‘인천애(愛)들’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지로 운영하면서, 2019년 ‘인천애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는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 시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없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3년 헌법재판소는 위 ‘인천애들 조례’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9헌마1417). 특히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항의의 대상과 분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인천시의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한 집회의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공유재산이나 공공시설의 관리라는 명목으로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제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인천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시장이 예외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여전히 자의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인천천귀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025년 제8회 인천천귀어문화축제를 인천애들에서 개최하려 사용승인 신고를 하였는데, 인천시는 공공질서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재량권 행사로서 조례상 운영심의 위원회가 불수리 여부를 심의할 수는 있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동일한 집회 장소 선택 이유를 들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많은 시민에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으나,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등 지자체가 조성한 각종 공용공간은 오히려 집회를 금지하는 ‘탈민주적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애들’ 소송을 담당한 우리 모임의 대리인들은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상식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조례나 위원회의 형식을 빌어 편파적으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귀중한 선례를 세웠습니다. 센터가 수행한 수많은 집회 불허 집행정지사건과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된 형사사건들이 있으나, 위 사건은 모임이 지켜온 집회의 자유를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주요 사건에 선정되었습니다.

05.

나를 뽑는 AI에 대한 알권리 :

공공기관 AI 채용 알고리즘 정보공개청구 소송

채용비리 사태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채용 심사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및 사기업이 AI 채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민변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AI 면접 사용 및 도입 경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차별발생유무, 관련 법률 준수 등 실태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다수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규범 수립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AI 채용을 시작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2020년 10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22년 채용절차에 사용된 의사결정자 제공 자료, 구체적인 평가 항목, 개인정보 항목별 목적, 위탁/용역계약 관련 정보, 인공지능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3847 등).

이 소송은 공공기관이 AI 채용을 민간업체에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우리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정보공개법상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공공기관이 해당 AI 채용 프로그램의 안전성, 공정성 및 설명 가능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이를 활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I 기술이 이미 채용 전반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안전성, 공정성 및 설명 가능성에 뚜렷한 검증절차가 없고, 향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한 의의가 있는 소송입니다. 민변은 2021년 공익인권변론센터 설립 5주년 당시에도 위 사건을 ‘앞으로 주목해야 할 5대 사건’으로 선정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는 한편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기획 및 진행한 투명성 소송으로서 정보인권 분야의 귀중한 선례가 되어 10주년 주요 사건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06.

정보주체의 권리를 되찾다 :

통신자료 무단 수집 위헌 확인 사건

그동안 수사기관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통신자료를 합법적으로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 취득 이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통지 절차가 법률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부당한 정보 수집에 대해 다투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 및 불복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 당해 왔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통신자료가 국가기관에 제공 당한 시민 500여 명을 대리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음에도 이용자가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6헌마388 등).

본 사건은 국가가 효율적인 수사와 밀행성 확보라는 명목하에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오던

오랜 행정 편의적 관행에 명확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사후통지 절차의 입법 의무화를 명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권력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사후적으로나마 통제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민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낸 모범적인 선례입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호 사건으로서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하였기에 주요 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07.

기업의 입막음소송에 맞서 건강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다 : 생리대 유해성 발표에 대한 입막음소송 대응

시민단체와 연구자, 언론은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생리대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 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문제점을 보도하며 여성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론화에 나섰 습니다. 일회용 생리대 제조사는 위 활동들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여성환경단체 및 그 대표자와 사무처장, 방출실험을 실시한 교수,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2021. 11. 제조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피고들의 방출실험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고, 보도 내용에 허위가 없으며, 관련 보도가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이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 568397 외(병합)).

이 판결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공익 활동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최근 언론과 표현의 자유 를 위협하는 주체가 국가권력에서 거대 자본으로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의 막대한 자본력과 압박에 타협하지 않고 시민의 건강권과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낸 뜻깊은 승소 사 례로 평가받아 주요 사건에 선정되었습니다.

08.

영업비밀에 가로막힌 노동자의 알 권리 :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정보공개 취소 사건

노동·시민사회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직업병 진상규명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결 과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청은 해당 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한 위해 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판단하여 부분 공개를 결정 했으나, 제조사는 이를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는 폭넓게 인정한 반면, 노동자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필 요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였습니다. 법원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내용상 부서 및 공정명, 단위작업 장소 정보가 결합 되면 전체 공정 배치를 유추할 수 있고, 이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에 유출 시

기업 이익과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 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법정 기준치 미만이라는 점을 근거로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을 부정했으며,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정보를 확보 하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보다 기업의 이윤 및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한 것입니다(대법원 2020두39549).

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생명·건강권과 직결된 작업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조차 국가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이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위험 물질에 대해 알 권리가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번번이 제한되는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건 이기에, 노동자들의 알 권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09.

국가면제의 벽을 넘어, 피해자의 존엄을 세운 인권의 승리 : 일본군 '위안부'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인신침해 불법행위라는 사안의 성격을 전제로 국가면 제(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현재 존재한다고 보아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긍정하고(1심 각하 판결을 취소), 나아가 위안소 설치·운영 및 피해자 동원·감금·성착취가 국제조 약·국제관습법 및 당시 국내법 위반을 수반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 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각 피해자(및 상속인)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동 원의 불법성과 반인도적 성격을 인정하고, 일본국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중대 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절대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사법적으로 선언한 판결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대리인단은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증명을 위해 관련 국제협약 및 해외 판결례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모여 오랜 세월, 진상규명 과 사과를 요구해 온 피해자들 개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국내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해 내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더 이상 '국가면제'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천명한 위 판결에 크게 고무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이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0.

‘기후 정의’의 이름으로 국가의 책무를 명하다 : 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2020년 3월 청소년들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탄소 감축목표 하한이 지나치게 낮은 것 등이 국가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재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2020헌바389 등(병합)).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헌법적 의무’임을 확인한 최초의 결정입니다. 비록 2030년까지의 단기 목표에 대해서는 기각·각하 결정을 내려 한계를 남겼으나, 아시아 최초로 국가의 기후 정책에 위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 기후 소송의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위기 대응(부작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과학적 탄소예산’과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헌법 담론의 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가 시급한 기본권의 문제임을 천명하는 결정으로 화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입법 시한인 2026. 2. 28.이 지나갔음에도 관련 입법 논의는 더딘 현시점에서, 변론센터 10주년 주요 사건으로 선정하여 이번 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11.

내 몸을 증명하지 않아도 ‘나’인 세상 : 트랜스젠더 신청인의 성별정정신청 법률지원

2023년 2월, 광주가정법원은 외과적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을 ‘외부 성기의 형태’라는 신체적 변형이 아닌, 당사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별 정체성’으로 전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입니다(광주가정법원 2022호기203).

그간 우리 사법 체계는 성확정 수술을 성별 정정의 사실상 필수 요건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이 어렵거나 원치 않는 이들은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 혐오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변론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수술 강요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며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낸 여러 하급심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진전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자기결정 기반 성별정정 제도’로 나아가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조 제3, 4호(성별정정 결정 시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침해적 의료조치 없이 자기결정에 근거한 법적 성별

12.

이주노동자가 더이상 출지 않도록 : 비닐하우스 숙소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배상청구 사건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기록적 한파 속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숙행 씨가 비닐하우스 내 난방 조차 되지 않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5. 9. 19. 담당 공무원의 업무 해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외국인고용법상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와 숙행 씨의 급속한 간경화 악화 등으로 인한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4나56742). 이에 대한민국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6. 1. 29.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동자의 생명권과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가 선언적 문구가 아닌, 사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임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큼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 대리인단은 권리구제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와 유족을 대리해 끈질긴 변론을 이어나가, 그 결과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더이상 열악한 상태로 방치할 수 없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이끌어내 이번 주요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3.

투명한 무기 거래 공개가 평화의 시작임을 증명하다 : 무기류 수출입 무역통계정보 정보비공개 취소소송

관세청은 2024년 4월, 방산기업들의 무기 수출액 현황을 돌연 비공개하였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우리나라 기업의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 무기 거래 등을 견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세청을 상대로 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64).

무기 수출 대상국 정보는 단순한 무역통계를 넘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국가에 대한민국의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그 침해에 기여하거나 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바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원이 국방·외교 영역에서도 정보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고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심사하여, 국가의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시민적 통제의 가능성을 연 이번 사건은 인권적 의의가 깊습니다. 특히 정치적 구호에 머물렀던 평화·군사 문제를 시민이 법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영역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므로 주요 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4.

부실수사의 책임을 묻다 :

피해자의 권리를 국가의 책임으로 확립한 판결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당시 강간 피해를 입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경찰 및 수사당국은 강간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결국, 2심에 이르러 추가 증인, 증거 신청 끝에 공소장이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해 실제적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진술이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는 현저히 불합리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서울중앙지법 2024가단 5123332), 법무부는 이러한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 포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법무부의 결정은 수사 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이는 피해자 인권 보장을 향한 중대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모든 과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이제 피해자 중심의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과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피해자들이 더 이상 목숨을 걸고 홀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회, 국가를 믿고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5.

유엔도 멈추라고 한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이 필요하다

동두천 성병 관리소는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격리·수용해 ‘치료’라는 명목 아래 인권을 침해한 국가 주도 성착취의 비극적 현장입니다. 그러나 동두천시가 관광지 확대 개발이라는 이유로 관리소를 강제철거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피해생존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민변은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2024년 9월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3인은 진정 접수 약 2개월 만에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에게 자행된 인권침해의 증거이자 역사적 기록물인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혐의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역사적 기억의 현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시민이 해당 장소의 의미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동 서한을 보낸 것은 성병관리소 철거가 국제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됨을 공인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므로 이번 주요 사건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성병관리소 건물을 예정대로 철거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역사적 기억 보존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기념공간 조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매우 형식적

이고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에 의한 성착취 역사가 지워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유엔 권고에 따른 실질적 보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0대 주목해야 할 사건

01.

수용자도 감염병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수용자 국가배상청구

이 사건 당사자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사망한 수용자(이하 '고인')의 유족입니다. 고령이었던 고인은 2020. 12. 1.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20. 12. 30.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고인은 2020. 12.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였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1. 1. 7. 06:00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외부 경찰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감염과 사망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단이 구성되어 고인의 감염 및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동부구치소 사망 사건 역시 그 중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밀집, 밀집, 밀폐(이른바 '3밀')의 환경은 감염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구금, 노인, 장애인 시설 등은 밀집, 밀집, 밀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이곳에서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안전대책은 부재하였습니다.

결국, 구치소의 과도한 수용인원, 의료 조치의 부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선화장 후장례 등 부당한 조치로 인해 충분히 애도하고 추모할 기회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취해진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나, 1심은 고인의 죽음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4가단5005939). 취약한 조건을 보완하고 인권적인 조치를 취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대리인단은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02.

예술은 죄가 아니다 : 타투 합법화를 위한 형사변론 및 헌법소원 사건

이 사건 당사자는 의사면허 없이 2020. 6. 24.경 스킨타투 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다른 당사자 B는 의사면허 없이 서화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

27조 및 제87조의 2 제2항 2호의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은 위 당사자들을 각 형사 변호하며, 타투시술을 처벌하는 근거 법률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타투(문신) 합법화의 근거 법률인 <문신사법 제정안>이 2025. 9. 25. 제정되었으나, 아직도 문신 사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시선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타투는 이미 보편적인 문화·예술이며, 고유한 개인의 개성, 표현과 자유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를 억압하는 사법적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으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03.

국가의 안전망이 부재했던 사회적 참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 10.29 이태원참사 법률지원

2022. 10. 29. 핼러윈 주말, 서울 한복판의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하였고 이후에도 생존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 및 고위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들의 교류를 제한했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참여 및 소통 그리고 추모와 2차 가해 방지를 요구하였고, 민변 내 대규모 TF가 발족하여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보였습니다.

2024년 5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5년 6월 마침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미완으로 유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책임자별 형사공판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권 보장, 의견 개진에 노력하였고,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2차 가해 등 관련 민·형사 사건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변의 법률지원은 참사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온전한 추모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일수록 사회적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멀어지는 판결을 비판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근거를 더하여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04.

나의 '뿌리'를 알 권리를 요구하다 : 입양정보 비공개결정 정보공개청구 및 헌법소원

이 사건 당사자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친부 정보에 관해 구체적인 사유 적시 없이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은 당사자의 친생부모가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생부모에 관한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입양인의 배경정보(입양사유 등)를 공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05.

청구와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8579). 법원은 “통계적으로 친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경우가 거부하는 경우보다 서너배 가량 많은데, 친부모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까지 부동의로 간주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생활 보호에 치우쳐 입양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은 1970-80년대 국가와 민간단체가 주도한 해외입양의 결과로 자신의 출생 정보에서 단절된 해외입양인들이 뿌리를 알 권리를 국가기관을 상대로 청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아동 권리보장원의 절차 위반과 전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와 이에 따른 헌법소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제8조가 보장하는 아동의 자신의 출신을 알 권리, 정체성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기에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복은 죄가 아니다 : 이동한 목사 교회재판 및 사회재판 법률지원

이동한 목사는 2019. 8. 31. 개최된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였다는 이유로 교회 내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정직 2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정직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진행 중에 2020. 12. 18. 개최된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 집례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회 내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2024. 3. 4. 최종적으로 출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리인단에서는 위 정직 2년 징계 및 출교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6. 1. 15. 위 출교 판결은 적법한 고발권자가 아닌 자의 고발에 기초한 위법한 기소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출교라는 최고 징계를 선포한 데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으며, 그 위법성의 정도 또한 중대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20825).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정직 2년 판결에 대해서는 절차 및 실체 하자가 처분의 무효를 판단할 정도로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두 소송 모두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동한 목사에 대한 교회법상 징계는 그 절차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배제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동한 목사는 “오늘 법원은 사람을 배제하는 판단이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어떠한 종교적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제동을 걸고 더 많은 영역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소송으로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06.

민주 동덕에 불이 오는 그날까지, 학내 민주화 투쟁에 대한 연대 :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법률지원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은 2024년 11월 학생들을 배제한 학교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추진 절차에 항의하며, 학생들의 대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동덕여대의 투쟁은 학교 역시 ‘민주주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화 투쟁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정당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고, 이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사람들을 색출해 내겠다며 많은 학생을 형사고소하였으며, 교내 징계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학생들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처럼 학교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 외에도 전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혐오세력에 의한 악마화와 차별적 선동, 무분별한 공격을 견디며 투쟁을 지속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2. 10.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김명애 등이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카합20251).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 및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을 상대로 본관 점거를 풀고 업무 방해를 중단할 것, 동덕여대 내 건물 및 부지에서 근조화환 설치·현수막과 사진 게시·복과 앰프 등을 사용한 구호나 노래 제창 등의 행위 등의 금지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으나, 대학의 비민주적 공학전환 등에 반대하여 학생들이 행사한 학내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각종 소송절차로 학생을 탄압하려는 대학의 시도가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2025. 5. 13. 제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를 통해, 현재까지 수십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교내 징계절차를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2026년 3월, 시위를 진행한 동덕여대 학생들을 상대로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민변은 2024년 12월부터 동덕여대 학생들을 위한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공학전환 반대 의사표시를 한 학생들에 대한 탄압에 적극적으로 맞서왔으며 법적 조력을 지속하고 있는바, 학내 민주화를 입막음하는 부당한 기소에 맞서 무죄를 받아내야 할 과제가 아직 존재합니다. 대학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07.

전세사기는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민변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102명(피해규모 약 83억 원), 약 370여 명(피해규모 약 305억 원) 등을 각 대리하여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의 의견 및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 제출하는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1심에서는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징역 7년이라는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4475).

전세사기는 일반적인 단순 사기 사건과 달리 '임차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주거취약 계층이 자신의 피해를 기본권 침해로 공론화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민변의 이와 같은 법률 조력을 통해 개별 피해자는 복잡한 사법 절차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권과 주거권을 실질화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08.

국가는 아동폭력의 영킨 실타래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 :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수용 국가배상청구 소송

국가는 1958년부터 1974년대까지 부랑아 단속을 위해 서울시로 하여금 '서울시립아동보호소'를 설치하도록 하여 법령에 반하여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부랑아라는 이유로 아동을 기한 없이 강제수용하였습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수용은 강제수용된 아동들을 전국 각지로 분산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폭행, 성폭행, 강제노동을 가한 대표적인 국가의 아동폭력사건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된 자들 중 19명을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나, 총 피해자는 10만 명에 달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아직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대리하는 피해생존자 9명과 그 가족 1명이 2025. 10.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개별 피해자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위헌·위법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대한민국, 서울시)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수용시설로 보내진 뒤 배움의 길이 끊겼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며 '이번 소송으로 국가가 영킨 실타래를 스스로 푸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감학원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의 아동폭력사건으로 진실규명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09.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투표소 : 수형자 선거권 소송, 우리 민주주의의 크기를 묻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이 2019년 당시 선거권 박탈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자유권규약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민변과 함께 개인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5년 3월 해당 조항에 대해 범죄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개인 진정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도 박탈한다는 이유로 자유권

규약 위반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엔 권고를 바탕으로 민변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나, 범죄의 성격·사회적 위해와 무관하게 오로지 '형량'만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여전히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현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이는 어떤 자격과 조건부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며, 이러한 보편적 원칙은 수형자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외면받아 온 수형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이 소송은 우리가 끝까지 주목해야 할 사건입니다.

10.

총구 앞에서도 멈추지 않은 법치주의 : 12.3 내란에 맞선 민변의 전방위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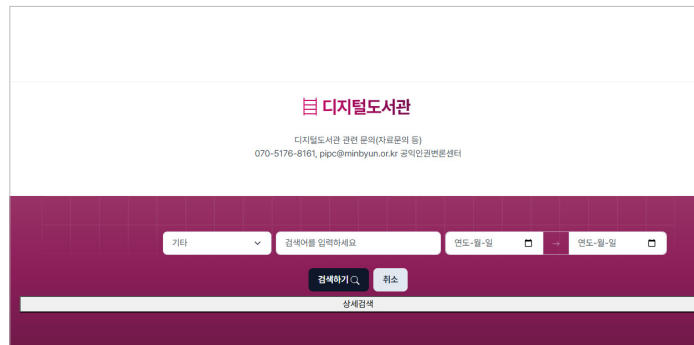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한 위헌확인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의견서는 권력의 폭주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어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민한 법적 대응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논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투쟁은 법정 안에서의 승패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어'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던 시민들에게 국가 폭력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확신을 주는 데 일조했으며, 시민사회가 지지치 않고 민주주의 수호를 외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결국, 민변의 법적 대응은 시민들의 퇴진운동과 결합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증명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인 내란 혐의 재판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이 판결이 우리 헌정사에 남길 '정의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해 국가의 근간을 흔든 행위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까지 시민의 눈이 법정을 향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과 특검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등 남은 사법 절차가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익인권변론의 허브 '디지털 도서관'

민변 디지털 도서관은 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공익인권변론 분야에 관련된 주요 판결, 서면, 연구 자료, 교육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회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본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론매뉴얼, 변론기, 국제인권자료 등 회원들의 공익변론을 위한 특정 서비스 또한 함께 운영 중입니다.



총 자료 건수	7,203건
판결문	2,710건
서면 등 변론자료	374건
자료집, 논문	3,511건
단행본, 정기간행물	545건
교육자료	32건
기타	31건

(2026. 3. 31.기준)

공익인권변론의 소식지 '월간변론'

민변 회원들이 수행한 다양한 사건 정보를 종합해 매월 넷째 주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과 인권 관련 자료를 함께 소개하며,
주요 사건 변론기 기고글은 오마이뉴스에 지속적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총 발송 건수	144호
발송율(평균)	99.3%
오픈율(평균)	53.3%
클릭율(평균)	10.1%

(2026. 3. 31.기준)

공익변호사 역량 강화 공익인권변호사단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회원들이 민변의 일상적인 공익인권 활동에 참여하고, 긴급접견을 지원하며,
변론 관련 정보를 제공·공유 받을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변호사단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호인 접견 요청, 변론 사건 검토 및 참여 기회 제공, 변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접견 지원 건수

230 건(1,157명)



주요 공익변론사건 등 연계

- 국립대학교 성추행사건 법률지원
-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청구 사건
- 부산 경리계 직원 부당징계 및 해고 사건
- 암피해자에 대한 집단괴롭히기소송 사건
- '유서대필 조작사건' 변론백서 기획단
- 코호트격리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 기후위기 활동가 집시법 위반 사건
-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행진에 대한 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 사건
- 유엔 과거사 특보 대응 번역 작업
- 국보법 해외단체 의견서 번역 작업
-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



주요 공익인권변호사단 대상 교육

- 수사초기단계 대응 실무교육 (강사: 최정규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단 세미나 모임 (강사: 황준협 변호사)
- 형사변론 노하우 (강사: 김철준 변호사)
- 집회시위 실무학교 (강사: 권영국, 이종훈, 최종연, 김상은, 류하경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단

강보경, 구정모, 권석현, 김범준, 김승유, 김연지, 김영주, 김은진, 김정욱, 김지윤, 김태환, 나대현, 류다솔, 박병언, 박은하, 박지현, 박천우, 박한희, 서보건, 서채완, 성유진, 송진성, 신윤경, 양성우, 오민애, 오현정, 우지혜, 이근욱, 이상현, 이상현, 이상희, 이윤주, 장범식, 전가영, 전범진, 전정환, 정명화, 정병욱, 정진아, 조덕상, 조세현, 조윤희, 조은호, 천지선, 최세안, 최석균, 최용근, 최정규, 하인준, 황호준

새로운 인권 현안을 발굴하고, 공익인권소송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심 연구모임

형사사건 재심사건의 처리와 재심절차의 개선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시적 연구모임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왜곡 유형에 관한 세미나, 개별 재심사건 수행 변호사 초청 세미나 등을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 연구모임

오사가 국제인권기행을 계기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왕래 및 지위개선, 인권침해에 대한 변론지원 등을 기획하고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지금도 회원들과 단체 활동가들이 재외동포의 지위개선을 위한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회권 연구모임

사회보장,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모여 공공부조제도 등 사회권 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 기초생활보장 관련 제도개선 검토, 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

집회의 자유를 위해 변론하던 변호사들이 모여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다가 근래에는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의 연구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소송 수행, 주요 판결 연구, 주석서 발간 등의 활동을 변호단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손해배상청구 대응모임

노동자, 집회 주최자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에 대응하고자 구성된 모임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괴롭히기소송에 대응해왔으며, 괴롭히기소송방지법 등 법제를 연구하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익인권소송 패소비용 대응모임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면 다수의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익인권소송을 위촉시키는 제도의 개선과 법안 제안,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대한 대응 등 변론활동,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익인권소송의 문턱을 낮추고자 활동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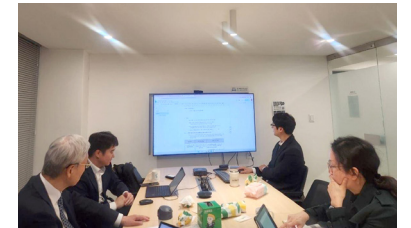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

코로나19 시기, 팬데믹 하에서 인권의 원칙을 되새기고자 결성한 모임입니다. 과잉처벌의 문제, 코호트 격리 문제, 정보인권 문제, 수용자 인권문제 등 코로나19 시기 발생했던 다양한 인권의 문제에 관해 보고서 발간과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노인인권 연구모임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국제인권법 차원에서도 노인인권협약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노인인권 문제는 풍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노인인권 연구모임은 노인인권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노인인권에 관한 법제연구, 입법 및 연대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참사 연구모임

세월호참사, 코로나19, 10.29 이태원참사 등 대형 재난과 각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법제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모임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입법활동을 연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용자인권 증진모임

수용자는 과밀수용, 선거권 제한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집단감염에 특히 취약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용자인권 증진모임은 수용자 인권 침해 현안에 대응하면서, 관련 법제와 판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의 길잡이가 될 다양한 변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변호사 대상 연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변호사로서의 재판실무, 전자소송, 서면작성, 증거의 발굴, 구두변론방법,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활용, 공익인권소송 실무 등 신입 변호사를 위한 단기 집중연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회원 대상 연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디지털 포렌식, 허위자백에 대한 법심리학적 이해 등 회원들이 공익인권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실무적 교육을 수시로 진행해 왔습니다.



예비법률가 대상 공익소송 소개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법률가 진로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로스쿨생,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민변이 진행한 공익인권소송을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차세대 공익인권소송의 주인공이 될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동/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가까이

공익인권변론센터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를 통해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다양한 활동과 공익·인권소송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센터 구성원들의 활동사진과 언론기고, 시민 공개 토론회 등도 함께 소개하며,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변론사건 관련 보도자료와 입장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변 홈페이지 내에 공익인권변론신청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과 회원 누구나 쉽게 제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센터 이메일(pipc@minbyun.or.kr)을 통해
공익인권소송 제안과 상담 창구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더 많은 목소리가 공익인권변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홍구 | 환경운동연합

“민변이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타계하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자서전에서 언급하셨던 말씀이지요. 특히 이 ‘사서 고생’을 가장 적극적으로, 현실의 언어로 구현하고 있는 곳이 공익인권변론센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난 2021년 1월 SK애경이마트 임직원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을 마주하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사안은 특히 소송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입증의 벽은 높아 “장렬하게 전사”할 각오부터 해야 합니다. 통쾌한 승리보다는 잘 버텨내야 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도 같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피해자와 약자들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은, 고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센터가 묵묵히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시민변론기금> 모금에 힘을 함께 모아 주십시오.

김상은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이하, ‘집시단’이라 함)은 2023년 7월 출범부터 현재까지 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 해고노동자, 평화인권활동가들은 집회시위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면 집시단에 집회시위금지집행정지사건, 국가배상소송사건, 형사사건 등을 요청했는데, 집시단이 현재까지 수행한 모든 사건들은 센터기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센터가 사회적 약자들의 변론기금신청에 대해 예외 없이 지원 결정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향후에도 센터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행사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센터와 함께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전범기업들을 피고로 제소한 수십여 건의 추가소송과 2025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피고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소한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소송투쟁의 험난한 길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신 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과거청산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큰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시민변론기금’이 더욱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앞으로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살다 보면 한 번씩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등록임대주택인데도 과도한 월세 인상을 요구받는다는, 가맹점을 하는데 본사의 갑질을 당한다는, SKT나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소액다수의 사건이라, 안그래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시민변론기금은 시민들의 ‘믿을만한 구석’입니다. ‘믿을만한 구석’이 튼튼해질수록 시민들의 인권과 먹고 사는 문제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시민변론기금에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지애 | 4.16연대

안녕하세요, 4.16연대 활동가 김지애입니다. 저는 고난함께 활동 시절부터 스탈라데이지호, 10.29 이태원참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장에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긴밀하게 연대해 왔습니다. 참사 현장의 핵심 구호인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민변은 이 가치를 법전 속에 가두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며, 피해 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언제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법률 조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삶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앞장서 주는 민변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나아갈 10년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무너진 안전을 다시 세우는 이 귀한 걸음에 많은 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저 또한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김필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개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고비마다 변론센터는 단순한 법률 조력자를 넘어, 장애 시민의 권리를 위해 함께 비를 맞고 외쳐준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고 장애인의 권리가 예산의 논리에 밀려날 때마다, 법전 속의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인권의 가치를 현장에서 증명해 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험난한 길을 마다치 않고 약자의 곁을 지켜주신 그 단단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10년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투쟁!



소라미 | 해외입양 대리인단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변 아동위 변호사들은 그동안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인권이 침해된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공익소송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입양된 지 40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해외입양인을 대리하여 국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양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해외입양인을 대리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양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이끌어내어, 현재 헌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센터의 도움으로 해외입양인들은 정부와 입양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설 수 있었고, 우리 사회에도 해외입양이 안고 있는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변 아동위는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해외입양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걸음에도 늘 응원을 보냅니다.



가뻐심규협

심규협 | 한국진보연대·전국민중행동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걸어온 그 길만큼 힘없는 사람들의 권익신장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29 이태원참사 공동상황실장으로 경찰소환 조사를 받을 때 난생 처음으로 같이 동행해 주신 변호사님이 서채완 민변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 한 명을 위해 변호사 한 분이 경찰서에 같이 가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에도 가장 먼저 연락드리는 곳이 민변이고 발 빠르게 달려와주시는 것이 민변 변호사님들이십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 시국을 비롯해 민중총궐기, 윤석열 거부권 거부 집회,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 등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정부와 경찰들의 각종 탄압이 있을 때면 가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현장 대응 등 어김없이 나서서 도와주신 곳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입니다.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시는 데 대해 매번 감사드리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나아가는 그 길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예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동환공대위')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집례한 무지개축복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재판에 회부된 이동환 목사의 재판투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성소수자 환대목회를 이어간 이동환 목사는 결국 감리회로부터 출교당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무효확인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이동환공대위는 변론센터를 통해 변호사님들을 만나고 재판비용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의 굳건한 지지와 협력이 없었다면 이동환 목사님과 공대위가 여기까지 재판투쟁을 이어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려진 사건들은 교회재판들을 비롯하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과 출교무효확인소송이지만 변호인단과 함께한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처분 인용으로 목사직을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서류발급을 거부한 감리회측에 서면으로 싸워주시는 일 등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인해 감리회 내부에서 외롭게 싸우는 이동환 목사님의 든든한 법률지원단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승리를 함께 만끽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법원에서, 사회법원에서 엮치락뒤치락하다보니 이제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과 출교무효확인소송 모두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이라니 믿기지 않기도 하지만 변호인단을 믿으며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이동환 목사의 성소수자 환대목회가 최종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시민변론기금>을 통한 재판비용 지원 덕분에 이동환공대위는 돈 걱정을 조금은 내려놓고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용기 내어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자 할 때 이동환공대위처럼 <시민변론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변론기금> 모금으로 이들의 용기에 힘을 보태주세요.



전은경 | 참여연대

한국은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노인의 삶은 어떨까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나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소득과 역할의 상실, 사회적 관계의 축소, 고립이나 소외, 연령주의(ageism) 팽배로 인한 존엄성의 손상, 학대와 차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는 키오스크,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각종 서비스 등 노년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가 노인에게 차별이나 배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복지의 시혜적 대상이나 사회적 약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노인과 관련된 기존 정책을 재정비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노인인권기본법을 입법청원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고요? 바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입니다. 든든한 동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민변론기금 조성에 함께해 주세요.

민변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현장과 법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제 더 많은 시민과 손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시민변론기금은 그 길을 이어가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 시민을 위해 쓰이는 기금입니다.



시민변론기금 참여 방법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더 많은 시민과 연결되고,
더 많은 시민이 공익인권변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민변론기금 안내 siminfund.or.kr

시민변론기금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1Ma7Roi>

후원문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T. 070-5176-8161 E. pic@minbyun.or.kr